

정책토론회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1년 8월 17일(수) 13:30 ~ 16:0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국회의원 김유정

주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후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 Program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일 시	2011년 8월 17일(수) 13:30 ~ 16:00
장 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 최	국회의원 김유정
주 관	(사)대한영양사협회
후 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장 변재일
대 상	학교장, 영양사, 학교급식 관계자 등
프로그램	
13:00~13:30	■ 등 록
13:30~14:00	■ 개 회 식
14:00~15:30	<p>[좌장] 임경숙 /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p> <p>■ 주제발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이영은 /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p> <p>■ 토의발표 이승민 / 법무법인 샘 대표변호사 엄기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진 / 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 성삼제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p>
15:30~16:00	■ 종합토론



# Contents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주제발표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1

이영은 |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토의발표

###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17

이승민 | 법무법인 샘 대표변호사

### 학교 영양사의 고통: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사이에서?----- 23

엄기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35

김유진 | 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

### 토의발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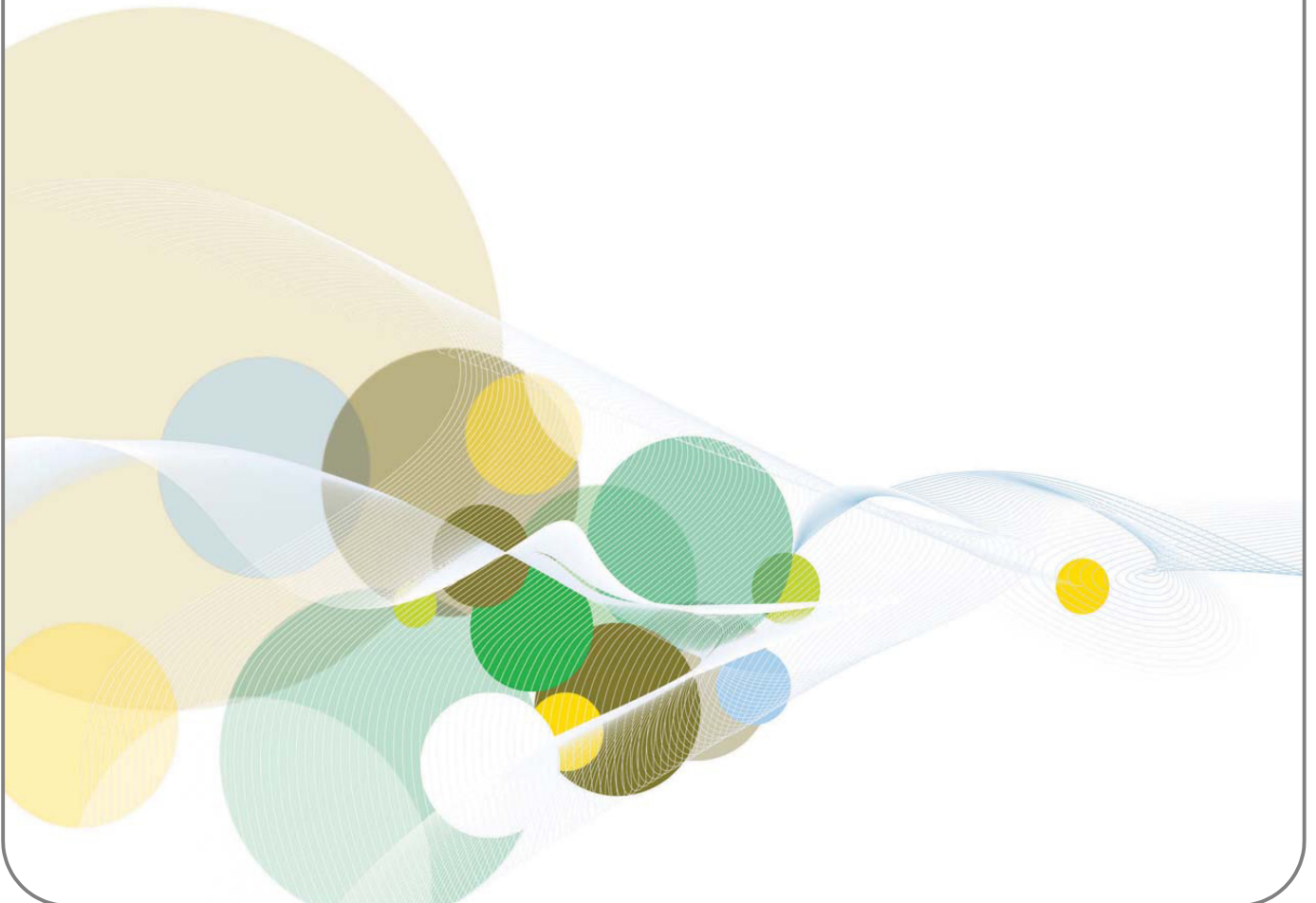
성삼제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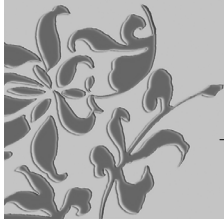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이영은 |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 이영은(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에 수학 중인 제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루종일 고된 업무에 시달렸을 텐데 집으로도 바로 가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안은 채 저녁에 1시간 이상 운전하여 수업 받으러 오는 늦각이 학생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하루는 논문지도 때문에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대학원 등록금도 비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려고 해? 졸업해도 영양교사 자격증만 나올 뿐 임용 고시 준비도 하지 못해 결국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교수님, 한 달에 130만원도 손에 쥐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금은 대출해서 오지만 그래도 대학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을 해요. 후회는 없어요” 라며 자신의 힘으로 논문을 완성해간다는 뿌듯함, 자아실현의 욕구와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 선생님인 제자들에게 머리가 숙여졌다.

##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현황

### 1. 학교 회계직 영양사 인력 배치 현황

- 2003년 영양교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많은 영양사들이 어린이들의 편식지도와 영양교육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2006년 영양교사 임용시험 후 지난 5년간 영양교사 법정정원(7,806명) 대비 56.5%인 4,412명 정원만 확보되는 등 배치가 저조하여 불가피하게 위탁급식 직영 전환교, 신설교 등에 대하여 학교 회계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 급식학교 영양교사 정원 확보 현황

년도	영양교사 정원(4,443명)	비고
2006학년도	1,700명	기존 식품위생직 영양사 전환 임용
2007학년도	2,408명	
2008학년도	252명	신규 임용
2010학년도	52명	
2011학년도	31명	

※ 법정정원(7,806명) :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8,471개교(6학급 이하 1,331개교, 7학급이상 7,140개교) 중 7학급 이상은 영양교사 1명 배치, 6학급 이하 학교는 2개교 공동배치

○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급식학교의 경우 비정규직(학교회계직 및 기타) 영양사가 3,759명 배치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에 따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급식학교 영양(교)사 인력배치 현황

구 분	급식학교수	영양(교)사	
		정규직	회계직 및 기타
초등학교	5,859	3,800	983
중 학 교	3,130	724	1,423
고등학교	2,253	880	1,332
특수학교	147	110	21
합계	11,389	5,514 (59%)	3,759 (41%)

※ 자료 : 2010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2011. 2. 28 기준)

▶ 영양교사, 학교급식전담직원 배치 규정	
학교급식법	<p>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lt;개정 2009.2.6&gt;</p> <p>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p> <p>부칙 &lt;제7962호, 2006.7.19&gt;</p> <p>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p>제40조의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 급상향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p>

## 2. 학교 회계직 영양사 근무 경력 현황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총 3,137명 중 73%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근무중임.

### ▶ 학교 회계직 영양사 근무 경력 현황

지역	근무 기간					소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서울	8	8	23	21	0	60
경기	262	222	240	115	5	844
인천	17	10	4	2	0	33
대전	18	32	27	28	3	108
대구	29	42	46	47	10	174
부산	90	49	57	46	0	242
울산	11	22	41	20	1	95
광주	31	36	59	35	6	167
전북	31	42	49	35	1	158
전남	60	46	58	93	21	278
충북	57	52	26	25	2	162
충남	62	51	59	18	5	195
경북	31	37	52	18	4	142
경남	93	79	116	45	2	335
강원	66	24	40	13	1	144
합계	866 (27%)	752 (24%)	897 (29%)	561 (18%)	61 (2%)	3,137

## 3. 학교 회계직 영양사 학력 현황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총 3,137명 중 84%는 대졸 이상이며, 이중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38%, 현재 교육대학원 재학중인 자가 18%로 총 56%가 영양교사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학교 회계직 영양사 학력 현황

지역	학력				소계
	대졸		대학원재학 〈영양교사 (2급) 자격 취득 예정〉	대학원졸 〈영양교사 (2급) 자격 취득〉	
	전문	4년제			
서울	12	12	8	28	60
경기	163	269	196	216	844
인천	0	22	2	9	33
대전	11	14	6	77	108
대구	12	38	36	88	174
부산	47	51	36	108	242
울산	16	36	26	17	95
광주	12	26	12	117	167
전북	0	36	17	105	158
전남	55	63	43	117	278
충북	33	43	30	56	162
충남	29	54	29	83	195
경북	16	45	37	44	142
경남	51	118	72	94	335
강원	26	68	23	27	144
합계	457(16%)	831(29%)	550(18%)	1,159(38%)	2,993

#### 4. 학교 회계직 영양사 급여체계

- 2004년 5월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확립,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노동부·기획예산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신분안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영양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영양교사 공무원 정원을 늘려 나가도록 유도하여 일용직 수를 줄이되, 현재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동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초임 수준(9급 초임)으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함.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2년 이상 연속시 무기계약직(회계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9급 1호봉의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됨.

▶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소속	직종	실태	개선방안
교육부 (각급 학교)	영양사 (1,842명)	- 공무원 68% - 비정규직 32%(임금은 9급 초임호봉의 60%)	- 단계적 공무원 정원 확대 - 비공무원 운용시 동종 공무원 수준으로 점진적 처우 개선

▶ 근로기준일수 기준 처우 개선(2007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백서)

(단위 : 천원)

직종(근로기준일)	지급기준	'07연봉액 (기준 96%)	'08연봉액 (기준 100%)	인상액 (‘08-’07)
영양사, 사서(365일)	일반직9급1호	16,241	17,222	981
사무보조(365일)	기능10급 1호	14,558	15,437	879
전산, 교무, 실험, 실습보조(275일)	기능10급 1호	10,968	11,630	662
조리사, 조리원(245일)	기능10급 1호	9,771	10,361	590

※ '08 처우 개선 연봉액 : 처우 개선 4% 인상 + '0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반영

○ 학교 회계직 영양사 급여 체계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별표 2 : 학교회계직원 연봉표〉에 의거 4등급(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지급액의 21배 상당 금액) 적용.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별표 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용 대상	연봉 기준액	비 고
1등급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공무원 월지급액은 본봉기준임
2등급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 I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의 문제점

#### 1. 학교 영양사의 회계직군 분류에 따른 문제

##### ○ 학교 회계직 직원의 정의

#####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2조(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영양사, 사서, 체육(전임)코치, 사무보조, 교무보조, 실험보조, 전산보조, 실습보조, 조리사, 조리종사원, 유치원보조, 방과후강사, 당직전담, 사감, 육성회보조, 학부모보조, 영어전담 강사 등 약 40여종의 회계직원이 있음.

-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급식관리 인력으로서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이며, 보조나 지원인력이 아닌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학교에 채용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보조직원 등과 함께 동일하게 회계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함.

- 학교 회계직 영양사 보수는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의 출처도 학교 회계가 아님.

##### ▶ 학교 회계직군 인건비 지출 현황

직종	지원
구육성회직원(행정, 교무) 전산보조	· 학교 자체예산(교육특별회계)
그 외 직종	· 교육청 지원(목적사업비)
영양사	· 일부(대전, 충북) : 수익자부담 50%, 교육청지원 50% · 대부분- 교육청지원(목적사업비)

- 학교 회계직 영양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로 호칭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도하였으며, 학교 회계직원의 분류 및 명칭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음.

[국회 질의 내용]

【문】 임금의 출처가 학교회계라는 사유로 학교 영양사는 '회계직 영양사'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임금의 출처에 따라 직업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학교영양사'로 명칭변경을 검토요청함

요구일 : '10. 8. 18/ 제출일 '10. 9. 2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진욱 사무관, 김동로 주무관, ☎2100-6543)

【답】

- '03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동법 부칙 3조에 따라 이미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학교급식소에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고, 집단급식소 신고요건으로 영양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명칭은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 일부학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도하겠습니다.

## 2.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급여체계 문제

### 1) 경력 불인정 보수기준

- 그동안 신규임용자나 장기근속 경력자간의 구분없이 모두 4등급(일반직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액 적용, 보수의 격차가 없는 연봉체제와 근속경력에 따른 영구적 승급 차단으로 열악한 보수에 따른 사기저하가 심각함.
- 실질적으로 1~3 등급의 연봉기준액을 적용받는 직종은 없어 학교 회계직원 연봉표상의 연봉등급은 유명무실한 기준임.

▶ 2008년도 및 2009년도 6월말 현재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금지급액(연봉제)

근무 유형	직종별	기준 근로일수	2008년도		2009년도	
			연봉액 (단위:원)	단가	연봉액 (단위:원)	단가
갑	영양사	상시	17,222,100	47,180	17,222,100	47,180

※ 연봉제 : 820,100원 × 21배 = 17,222,100원 (9급 1호봉 월지급액 21배)

### 2) 보수체계 이원화로 연봉제와 호봉제간의 차액 심화

-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종 공무원(식품위생직, 영양교사)에 비해 연봉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학교 회계직 영양사라 할지라도 연봉제, 호봉제간 차액은 상당함.

▶ 영양사 신분(영양사, 식품위생직, 영양교사)에 따른 연봉 및 차액 비교

근무 연수		4년 근무		8년 근무		비 고
		연 봉	차 액	연 봉	차 액	
영양사	연봉제	17,222,100	-	17,222,100	-	9급1호봉 월액의 21배 (매년 동일기준 적용 재계약)
	호봉제	21,000,000	3,777,900	27,865,500	10,643,400	기능직 10등급8호봉 (대전교육청 시행사례)
식품위생직		22,600,000	5,377,900	28,000,000	10,777,900	공무원 보수규정
영양교사		26,500,000	9,277,900	33,000,000	15,777,900	
※ 연봉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호봉제(대전광역시교육청) : 기능직 10등급 월액기준 + 근속호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2004년 이전에 구 육성회직원(호봉제)으로 채용되어, 2004년 연봉제 전환시 당시 보수가 연봉제로 전환할 때 보수보다 높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호봉제로 남아 있음(연봉액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                     </div> - 4년 근속(4호봉) : 879,300원+각종수당+상여금 = 약 21,000,000원 - 8년 근속(8호봉) : 1,078,100원+각종수당+상여금= 약 24,800,000원 ※ 근 거 :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제7조						

- 또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상의 영양교사 정원 부족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교장 임용을 통해 급식학교에 배치되어 장기간 학교급식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급식 발전 및 집단급식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매우 열악한 대우(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함.

3) 공무원 보수 동결에 따른 학교 회계직 영양사 보수 동결 및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으로 인상분 미미함

- 1999년 이후 매년 3% 이상의 상승이 이어져 왔으나 2008년부터 2010년 연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 학교 회계직 영양사 보수에 공무원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하였으나 인상분은 미미한 수준임.

▶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안 주요내용

2010년도 대비 연봉기준액 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신설로 설날, 추석 각 10만원씩 정액 지급함에 따라 1.2~1.9% 추가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신설하여 3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 지급



▶ '10년 및 '11년 학교회계직원 임금 대비표

연도	구분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등		
		상시근무	상시근무	수업일근무	급식일근무
2010	연봉액	17,222,100	15,437,100	11,630,692	10,361,889
	(일급액)	47,190	42,300	42,300	42,300
	(월급여)	1,435,180	1,286,430	969,230	863,500
2011	연봉액	17,914,200	16,045,400	12,089,000	10,770,200
	명절휴가보전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연지급액	18,114,200	16,245,400	12,289,000	10,970,200
	(일급액)	49,080	43,960	43,960	43,960
	(월급여)	1,492,850	1,337,117	1,007,417	897,517
인상 내역	월급	57,670	50,687	38,187	34,017
	연지급액	892,100	808,300	658,308	608,311
	증가율	5.18%	5.24%	5.66%	5.87%

\* 수업일근무는 275일, 급식일근무는 245일을 유급일수로 산정한 경우

※ 출처 :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안 보도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11. 2. 24)

4) 동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미지급

▶ 2004년 학교회계직원과 정규직(식품위생직) 영양사 처우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정 규 직		학교회계직원	
	구 분	금액(연)	구 분	금액(연)
영양사 사 서	○ 봉급(9급 1호봉) (월 602,800원)	7,234	월 봉급액의 26배 - 602,800×26=15,672천원	
	○ 기말수당 (50%, 4회)	1,205		
	○ 정근수당 (50%, 2회)	603	'04년 (목표액의 84%)	
	○ 명절휴가비 (75%, 2회)	904	- 15,672천원×0.84	
	○ 가계지원비 (50%, 5회)	1,507	= 13,164천원	
	○ 정액급식비 (월12만원)	1,440		
	○ 교통보조비 (월12만원)	1,440		
	○ 직급보조비 (월10.5만원)	1,260		
	소 계	15,593		13,164
	○ 가족수당(월)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	없 음	
	○ 자녀학비보조수당(연)	고 120만원		
	○ 봉급조정수당	기본급의 25% (연1회)		

▶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7조 (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를 정한 경우는 당해 근무일수를 연봉기준일수로 본다.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5) 동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영양사 면허 수당 미지급

- 식품위생직 영양사(9급)의 경우 영양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을 월 20,000원 지급받고 있으나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지급받지 못함.
-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 광주 2개 지역만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면허수당(월 20,000원) 지급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837호)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개정 2008.12.31>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 업무 수당	<p>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나.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 공무원</p> <p>다.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p>	<p>·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p> <p>·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p> <p>· 8급·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p> <p>·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p> <p>·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p> <p>(가산금)</p> <p>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3.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용권 문제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채용(임용)권이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 순환, 전보없이 장기간 동일학교 근무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음.

○ 타 시·도 관련 사례

-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2009. 4. 20, 전라북도 교육규칙 제588호)을 통해 영양사 임용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함.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2009. 4. 20 규칙 제588호)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24. (생 략) ( <u>신설</u> )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24. (현행과 같음) 25. <u>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제영양사의 임용</u>
제4조(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3. (생 략) 4. <u>과학실험보조원 등 일용직 임용 및 관리</u> 5. ~ 30. (생 략)	제4조(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u>학교 회계직원의 임용(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간제영양사 제외)</u> 5. ~ 30. (현행과 같음)

#### 4. 학교 회계직 영양사 근무시간 문제

- 공무원(일반직, 교사직, 기능직 등)과 달리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경우 점심시간(12:00 ~ 13:00)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휴식시간으로 간주)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음.

▶ 교원의 근무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교행01136-104-F('85.2.6)의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조정지침에 의해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985년 2월 7일부터 **09:00 - 17:00**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IV.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

### 1. 학교 업무 보조하는 회계직군에서 영양사직 별도 분리

- 현재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동종 동일직무의 영양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급식전담인력이므로 여타의 학

교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회계직 근로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직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 2. 학교 영양사 급여체계 현실화

○ 2011년 7월 조사된 중소기업 초임 연봉은 고졸이 평균 1,742만원, 전문대졸(2·3년대졸)이 평균 1,994만원, 4년제 대졸이 평균 2,279만원, 대학원졸이 평균 2,540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16% 전문대졸, 29% 4년제 대졸, 56%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811만원 정도의 고졸 수준 임금을 받고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사기가 매우 저하됨.

○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제도 마련 필요

- 신규 임용자나 장기 경력자간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을 근무연수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학교 회계직 영양사 호봉 승급기준 마련(공무원 승진연수 적용)

### [근무연수별 승급 기준(안)]

-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정함
- 보수 승진 적용시는 1호봉 삭감 원칙(식품위생직과 동일)

근 무 연 수	보수지급 기준	근 무 연 수	보수지급 기준
1년미만 2년미만	9급 1호봉	4년이상 5년미만	8급 4호봉
2년이상 3년미만	9급 2호봉	5년이상 6년미만	7급 3호봉
3년이상 3년미만	8급 2호봉	6년이상 7년미만	7급 4호봉
3년이상 4년미만	8급 3호봉	7년이상 -	매년 1호봉 승급

- ※ 9급보수 → 8급 보수 : 식품위생직 평균 승진연수 적용(2년)
- ※ 8급보수 → 7급 보수 : 식품위생직 평균 승진연수 적용(3년)
- ※ 7급보수 7년 이상 → 매년 1호봉씩 승급 적용

## 3. 각종 수당제도 도입

○ 영양사 면허수당(월 20,000원) 지급

○ 기타 수당 지급

-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식품위생직에 준하여 지급

▶ 교육공무원(영양교사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

- 1)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 되, 출근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2) **정액분을 제외한 시간외 근무수당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지급분 ; 10시간 포함)**

#### 4. 학교 영양사 임용권 개선

- 학교 영양사 임용권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 임용으로 전환
  - 지역별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
  - 교육장 관할구역 내 순환, 전보 보직제도 시행

#### 5. 기타 처우 개선

- 근무시간 개선
  - 급식 제공 및 각종 식생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12:00 ~ 13:00)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 맞춤형 복지 제도 개선
  -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의료실비 보상 등
  -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액 상향 지급
- 연수(교육훈련) 실시
  - 직무연수, 방학 중 현장체험연수
- 각종 표창제도 확대 시행

### V. 마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과 편식교정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급식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 안전한 급식과 친환경적인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 영양(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학교급식 현장에는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 3,000여명이 급식 관리와 급식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열악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로는 학교급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에 대한 현재보다 획기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학력과 경력에 합당한 보수 지급 및 직업 안정성이 보장될 때에 보다 내실 있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할 것임.

---

#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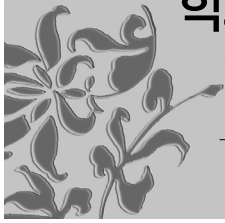
---

이승민 | 법무법인 샘 대표변호사









#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이승민(법무법인 샘 대표변호사)

## I. '회계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 현재 학교장이 채용하여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교 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이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회계'에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 용어가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님. 초·중등교육법<sup>1)</sup>에는 학교 내의 근로자들 중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냥 '직원'으로 호칭하고 있음.
- 위 용어는 그 의미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교 영양사들의 정체성 및 자존감에도 흠집을 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라고 보기 어려움.
  - 위 용어는 그 의미상 '학교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해되기 쉬움. 통상 일반 사업장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회계 직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학교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이해할 소지가 많음. '회계직 영양사'의 호칭은 그리하여 더욱 혼란을 가중함.
  - 노동자의 구분은 대체로 그 역할(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이나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또는 사업장의 성격(공무원, 공사직원, 기업체직원 등)에 따라 하지, 급여의 지급 근거에 따라 하는 예는 찾기 어려움.
- 이처럼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임.

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발제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영양사’로 호칭하기로 하였다면 이 호칭을 사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영양사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II. 학교 영양사의 급여체계에 대하여

- 현행 체계 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독자적 보수 체계의 마련과 호봉제의 도입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음.
  - 발제자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토론자도 그에 전적으로 동감함.
  -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그 역할과 기능에 거의 차이가 없고, 발제자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력이나 학력에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에서 보아도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의 심한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마땅한 과제라고 판단됨.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무원들의 임금에 연동시켜 규정할 경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되고,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의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나아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호봉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데 반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음.
-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동일한 자격으로 같은 역할, 기능을 수행하므로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대폭 전환해야 함.
  - 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위 법 조항은 영양교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제자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할 학교 중에서 약 59% 상당 만이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바, 나머지 학교에서도 영양교사를 채용하여 법적 요건을 완비해야 할 것임. 특히 발제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학교 영양사 중 약 56% 상당이 영양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더 높다고 판단됨.

### III.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를 토대로 채용하고 있는데, 법률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 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2 제1항에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 특별히 학교회계의 사용 용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 나아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도 없음.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내에 직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직원을 반드시 학교장이 채용해야 한다거나 학교회계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오히려 학교별 직원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감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음.
-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드시 학교장이 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감이 채용하여 각 학교에 배치한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이나 조례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 발제자께서 사례로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에 더하여 학교 영양사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 전보 등에 관한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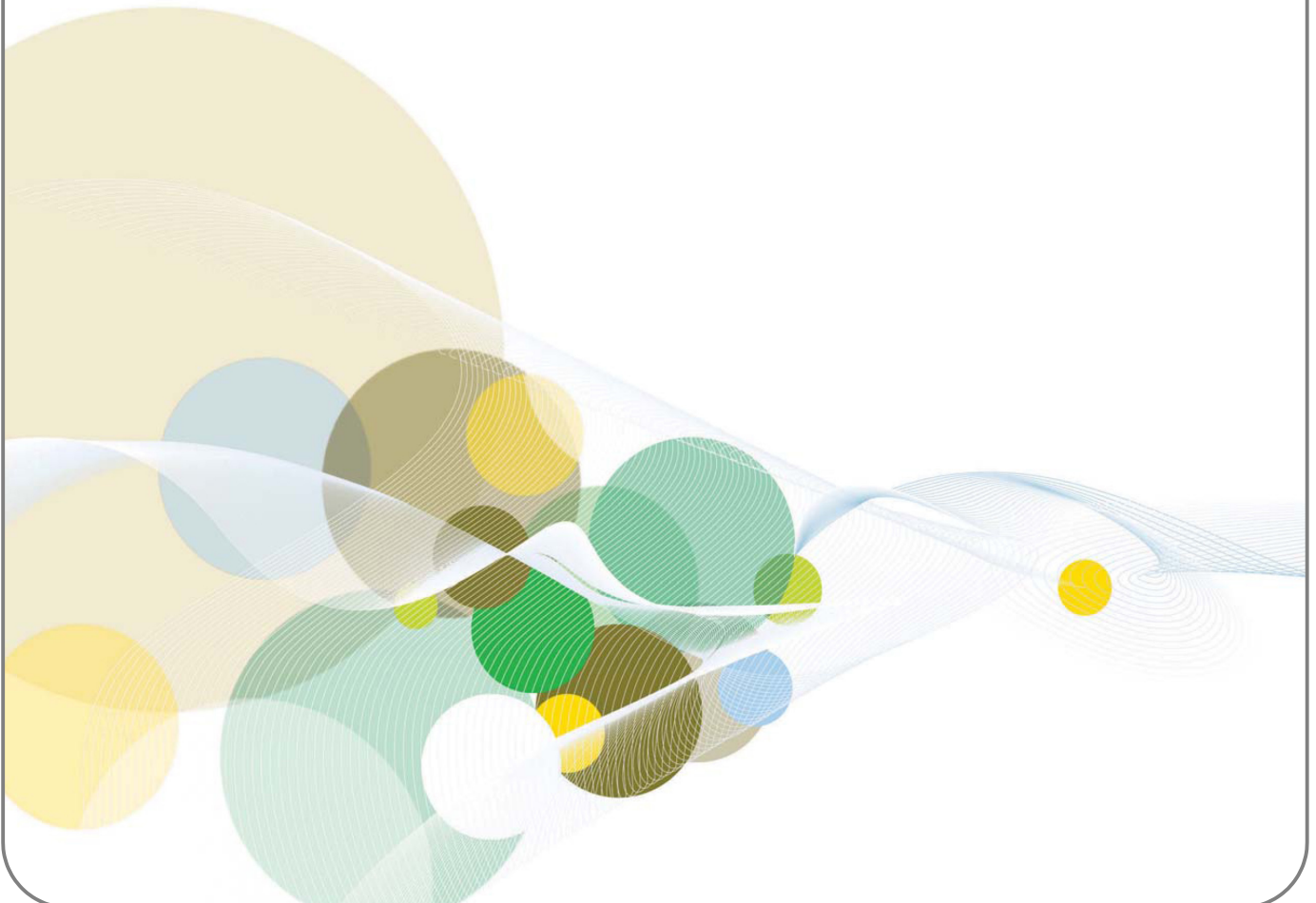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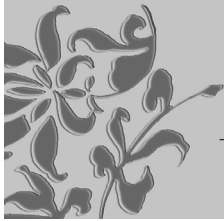
# 학교 영양사의 고통 :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사이에서?

---

엄기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학교 영양사의 고통 :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사이에서?

▶ 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I. 문제의 성격

#### ○ 학교급식의 확대와 영양교육의 실시<sup>1)</sup>

##### 1) 한국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 정책적 함의

- 한국의 학교급식은 구호차원에서 1953년 UNICEF 등이 원조한 분유를 비롯한 농산물을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작된 이후 1981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중·고등학교 급식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음.  
⇒ 학교급식이 단순히 학생복지·학교복지, 나아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옴.
- 1996년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1996. 12. 30, 법률 제5,236호)됨에 따라 외부 위탁급식 업체에 의한 학교급식이 허용(직영급식 원칙 정립되지 못함).
-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방향으로, 특수학교는 1992년에, 초등학교는 1998년에 전면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중학교는 초·중·고교 연계급식을 위한 급식확대 요구가 증가해 온 맥락에서 고등학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당시 언급과) 지시사항으로 대학입시 준비 등 학업부담이 많은 학생을 위해 1998~1999년에 우선 집중 추진하여 1999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되어 왔음.
- 학교급식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숫자임.  
⇒ 학교급식의 전면실시에 따라 학교급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국민'의 수를 헤아려 보더라도 학교급식이 국민 영양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학교급식이 학생복지 프로그램을 넘어서 국민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활성화되었어야 함을 의미함.
- 위탁급식 업체가 공급하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급증하면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학교급식개선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옴.  
⇒ 학교급식이 학교자치의 확대·강화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에 연계되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강화와 책무성 확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했음.
- 학교급식에 안전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 청원 운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급식의 확대와 전면실시, 그리고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여러 차례 총선·대선 선거공약으로 사회작정적·교육(정책)적 의제설정을 통해 법제화되어 위상 강화됨.
  - 제14대 대선공약(김영삼 대통령 :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 제15대 대선공약(김대중 대통령 : 급식 확대와 전면실시), 제16대 총선공약(새천년민주당 : 중학교 전면실시, 급식체계 개선, 급식교육 강화, 영양교사화 추진), 제16대 대선공약(노무현 대통령 : 급식의 질 개선, 급식체제의 내실화, 영양교사의 배치), 제17대 총선공약(열린우리당 :

- 정책(담론)의 진화와 추진 : H/W → S/W → Human/W

■ 정책의 역사 : 구호급식으로 출발(起源)과 초기의 성격]

학교급식 실시 기회의 확대와 실질화 → 급식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 급식 위생(환경)기준의 제정[HACCP] → 급식 운영체계의 개선[제구축: 위탁제와 직영제] → 영양교사제도 도입[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sup>2)</sup> → 학교급식의 무상화[정책담론의 재구성 : 국가의 ‘지원’에서 ‘책무(성)’로! : ‘무상급식’(의무급식) ⇒ 복지담론의 등장(부분·단계적 실시 vs 전면 실시, 선별실시 vs 보편실시)]

☞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파악하지 않고 복지프로그램으로만 이해하는 보수세력의 공격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부유층의 ‘무료급식론’ 등]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확대방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2011. 8. 24)

→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과연 이 순서가 정당했는가? : 학교급식(정책)의 특수성?

급식의 질 개선, 급식체계의 내실화, 영양교사의 배치, 한나라당 : 급식대책위원회의 내실화, 민주노동당 : 직영급식·무상급식·안전한 국산 농산물 사용·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 이익집단의 활성화에 연계되어 국회와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제설정화(정치적으로 의제설정이 되어 왔음)

⇒ 가시적 결과 위주와 성과주의 경향에 의해 학교급식의 확대와 전면실시(H/W)에 치중하였으나, 학교급식정책이 S/W적 관점을 바탕으로 Humanware(교육+인적자원개발)의 기반 형성으로 정책 관점이 병행·전환·재정립됨을 의미함.

2) 이제 진정으로 ‘영양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 법률 제정의 의의와 과정은 사회적 의제 설정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제도화이다. 대부분의 경우 현실이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이지 현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법률이 앞서 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른바 ‘영양교사화’는 ‘학교급식의 확대와 전면 실시’라는 H/W + S/W가 진전됨에 따라 ‘영양교육의 제도화’라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내실화, 즉 S/W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더 나아가 ‘영양교사화’와 ‘영양교사의 (확대) 배치’라는 Humanware의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입법화과정이 학교 영양사를 중심으로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영양교육의 재정립과 확대, 그리고 내실화, 이를 위해 영양교사의 위상 재정립과 제도화는 필요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지만, 인식 현실의 조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의 불충분이 있었기에, 영양교사 법제화를 입법권의 남용이라고까지 지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정규직·비정규직을 비롯하여 학교 영양사의 직업적 신분의 복잡함, 양호교사의 보건교사 명칭 변경에 곱지 않았던 시선까지 겹쳐져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실정을 새삼스레 검토히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 인식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급식의 내실화,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절박성, 영양교사화의 정당성 등을 새삼 강조하고, 영양사와 영양교사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교육의 실시, 대(對)사회적 봉사활동 등 사회적 기여 노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후속 작업을 더욱 집중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일도 필요하다. 이제 필요조건으로서 법제화된 영양교사가 사회적·교육적으로도 ‘영양교사’가 되어야 충분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즉, 이제 진정으로 영양교사가 제대로 되는 길에 다시 나서야 한다. (...) 그래야 영양교사의 배치와 확대에 국민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세상읽기(권두언): 엄기형, 국민영양, 2004. 5, 대한영양사협회]



■ 영양교육의 실시와 제도화

- Humanware의 문제: 교육에서 교사(Humanware)의 중요성 -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아된쥐 파동'과 영어 공교육 강화론의 연장에서 도입한 영어회화전담교사(학교 회계직)의 문제
- ☞ 교원정책의 문제: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의 불일치 현상, 비교과교사의 양산 현상, 교원정원정책의 문제(법정정원 확보 미달, 정원관리에서 총정원제(행정안전부의 권한과 논리)와 교과교사와의 Zero-sum관계, 수급·배치의 기준 설정과 현실논리 등)
- ⇒ 학교 영양사 직종의 직렬 등 임용방식임용주체 또는 급여체계 등,  
영양교사의 수급·배치와 (총)정원관리(체계)의 문제 등의 복잡성

○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

- 조급성 : 시기상조성(?)
- 체계와 기반 마련의 불충분성 : 일본의 경우 : 「식교육기본법」 제정·실시<sup>3)</sup>
- 특히, 영양교육체계 기반 마련 불충분성 : 교육(프로그램)의 위상과 성격, 교육과정, 교육시간의 성격과 배정(또는 확보) 등

3) 일본은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을 2005년에 제정하였다(6월 9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 6월 17일 공포). 이 법률의 목적은 최근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살아가는 동안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양성하기 위한 식육(食育)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바, 식육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육에 관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풍부한 인간 형성, 음식에 관한 감사와 이해,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자녀식육에서 보호자·교육관계자 등의 역할, 음식에 관한 체험 활동과 식육추진활동의 실천, 전통적인 식생활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등에의 배려 및 농어촌의 활성화와 식료자급유통의 향상에의 공헌,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서의 식육의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육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고,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육의 추진에 관해 국가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별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셋째, 교육관계자 등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은 기본이념에 따라 적극적인 식육의 추진 등에 노력하고, 농림어업자 등은 기본이념에 따라 농림어업에 관한 다양한 체험기회의 적극적 제공 등을 노력한다.

넷째, 국민은 가정, 학교, 탁아소, 지역 그 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에 스스로 노력하고, 식육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식육추진회의는 식육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 등을 정하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구역 내에서의 식육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식육에 관한 기본적 시책으로서 가정, 학교, 탁아소등에서의 식육의 추진, 지역에서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활동의 추진,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되는 농림어업의 활성화, 식문화의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식품의 안전성·영양 그 밖의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제공 및 국제 교류의 추진 등을 규정한다(<http://www.sangiin.go.jp>, 2005. 9. 1).

○ 교육의 문제인가? 노동[조건: 임금 등 처우개선]의 문제인가?

- 비정규직 문제는 학교 영양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회계직 전체의 문제이며, 한국사회에서 ‘노동’부문 전체의 문제임
- : 또한, 이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고, 취업과 실업[청년실업 포함] 전반에 걸친 직업·고용체제의 문제임.
- :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 받는 문제이기도 함.
- : 아울러, 제도화된 영양교사 임용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함 : 영양교사 선발·임용제도의 실효성, 영양교사제도 도입 이후 관련 학과 졸업생 신규 취업자와 기존 (정규직·비정규직) 영양사의 문제 등.

○ 업무[職務] 성격의 문제

- 직종의 성격과 직무의 범위의 문제 검토 필요.
-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정당성과 충분성의 문제 검토 필요.

##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방안의 검토

### 1. 용어와 직군 분리의 문제

#### 1) 용어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

- 현재 학교장이 채용하여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학교 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명칭 부여과 직군분류<sup>4)</sup>
- 이 용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회계’에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두고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이 위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영양사, 사서, 체육(전임)코치, 사무보조, 교무보조, 실험보조, 전산보조, 실습보조, 조리사, 조리종사원, 유치원보조, 방과후강사, 당직전담, 사감, 육성회보조, 학부모보조, 영어전담강사 등 약 40여 종이 있음.
- 그러나, 이 용어가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내의 근

4) 제2조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로자들 중 교원이 아닌 사람을 그냥 ‘직원’으로 호칭하고 있고,<sup>5)</sup> 학교회계직원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음.<sup>6)</sup>

- 이 용어는 그 의미상 ‘학교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이해되기 쉬움. 통상 일반 사업장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회계직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직원’이라고 하면 못사람들은 그 의미를 ‘학교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이해할 소지가 많음.
- 이 용어는 그 의미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도 큰 흠집을 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라고 보기 어려움.
- 노동자의 구분은 대체로 그 역할(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이나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또는 사업장의 성격(공무원, 공사 직원, 기업체 직원 등)에 따라 분류하지, 급여의 지급 근거에 따라 하는 예는 찾기 어려움. 급여의 지급 근거에 따라 노동자를 지칭할 경우 임용의 보장성 여부 등 차별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흠집을 낸다고 볼 수 있음.
- 대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음(강문대, 2011: 97).

-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영양사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 관리인력으로서 직무의 특성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영양교사를 대신하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종이며, 보조나 지원인력이 아닌 학교급식 업무를 (대체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이므로, 학교에 채용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보조직원 등과 함께 동일하게 회계직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함.
- 학교 회계직 영양사 보수는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의 출처도 학교 회계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2) 학교업무보조 성격의 회계직군에서 분리

- 현재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동종 동일직무의 영양교사와 유사 또는 근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업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급식전담인력이므로 여타의 학교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학교 회계직 근로자와

5)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6) 학교 회계직 영양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로 호칭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음: 국회질의에 대한 답변 참조.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직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과 처우개선 적극 검토 필요.

## 2. 학교 영양사 급여체계 현실화

- 직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서 사기 저조를 개선할 급여·보수체계의 개선은 필요하고,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제도 마련도 필요함.
  - 신규 임용자나 장기경력자 사이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을 근무연수에 따라 승급할 수 있도록 학교 회계직 영양사 호봉승급기준 마련 필요: 공무원 승진연수 적용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수당제도 도입과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영양사의 경우 면허수당 또는 기술업무수당 가운데 어느 종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검토 필요
  - : 이미 ‘면허’를 요건으로 임용되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직종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타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식품위생직 영양사(9급)의 경우 영양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을 월 20,000원 지급받고 있으나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16개 시·도 가운데 전북, 광주 2개 지역만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면허수당 지급(월 20,000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837호)[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개정 2008.12.31>]은 주로 소방직[지방직] 등 기술직을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학교 회계직 영양사도 업무의 특성상 식품위생직과 마찬가지로 기술업무수당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임.
  -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 기타 각종 수당을 식품위생직에 준하여 지급하는 문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학교 회계직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임.

## 3. 학교 영양사 임용권 개선

- 학교 영양사 임용권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 임용으로 전환
  - 단위 학교당 학교 영양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2개 이상의 학교에 배치[「초·중·고등학교법」 제40조의3 ②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두는 영양교사처럼]하는 순회 영양사에 적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급식·영양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검토 가능한 문제임.

- 학교 영양사 임용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2009. 4. 20)하였다는 전라북도의 사례[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전라북도 교육규칙 제588호)]의 정확한 맥락과 사유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일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 제40조의3 ① 단서가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권한 위임과 이의 법률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추가 검토 필요.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용권이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 단위 학교 채용에 따른 “순환, 전보 없이 장기간 동일 학교 근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인가?
- “교육장 관할구역 내 순환, 전보 보직제도 시행” : 보직제는 타당하지 않는 주장임.

#### 4. 기타 처우 개선사항

##### ○ 근무시간 개선

- 급식 제공과 각종 식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12:00~13:00)은 학교 영양사의 본래적 업무가 수행되는 중요한 영역이자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함.

##### ○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의료실비 보상 등 복지제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액 상향 지급 등 조정 필요.

##### ○ 직무연수, 학생방학 중 현장체험연수 등 연수(교육훈련) 실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함.

- (학교 회계직) 영양사라도 배치 목적에서 영양교사 배치가 되기 전에 필요한 학교급식전담직원[「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이므로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형평성 때문에라도 필요함.

##### ○ 각종 표창제도 확대 시행 역시 모든 공무원,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도 개선, 업무 효율성과 향상 등과 관련된 성취동기 진작, 차별(감) 시정을 위해

서도 필요함.

### III. 맺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지향하며

- 실효성 있는 학교영양교육의 개선: 실질화와 제도화 보완·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 영양교육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교육법」 또는 「영양교육 기본법」의 제정 검토 필요: 일본의 「식교육기본법」 Bench-marking 필요.
- 무상학교급식의 전면화[전면실시와의 연계성 실질화]
  -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정책담론의 충실한 논리 개발·보완, 정책의제의 재설정[재의제화]과 확산 및 내면화 필요.
  -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여전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적인 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관점과 태도의 문제 극복 필요.
  - 당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확대방식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2011. 8. 24)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태도 결정과 참여 (활성화)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 선거 앞두고 ‘공생발전’을 내세워 복지논쟁 기선잡기(한국일보, 2011.8.16)와의 충돌도 문제임.
  -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2011. 8. 15)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임기 4년차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는 ‘공생발전’이다. 남은 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낳고 있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화려한 수사지만 구체적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정부의 현 정책과 상충하는 지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sup>7)</sup>

7) (...) 정치적 위기감도 배경으로 평가된다. 민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시장원리만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치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집권 초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불거진 촛불집회 당시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 2009년 경축사에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반전을 시도했던 때와 같은 맥락이다. (...) 문제는 구체적 정책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의 대부분을 공생발전의 개념과 목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새로운 정책 제시는 사실상 전무했고, 미소금융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문제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관을 재확인했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의 복지 확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곳곳에서 목표와 현실 정책의 충돌도 관찰된다. 거창한 목표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덮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 다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 받은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한겨레, 2011. 8. 16: 1)기에 비정규직으로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게도 한 줌 햇살이 비출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거냐?

---

배경이다. 당장 이 대통령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수입을 축소하는 감세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가 이뤄지면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균형재정은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복지재정 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201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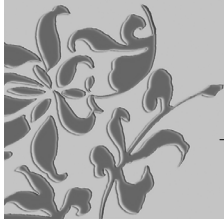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김유진 | 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 김유진(전주문학초등학교 영양사)

### I.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증가와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며 공공부문과 비 공공부문 등 여러 분야 곳곳에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인 교육기관에도 학교 회계직의 신분을 갖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으나, 특히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이 하루빨리 정규직이 되어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차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6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마련,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고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산하기관 등 조사 대상기관별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용역 현황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하고, TF팀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차한 시점에서 오늘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올바른 추진방향과 정책을 제언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안타까운 현실

2004년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인력 충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학교 회계직 신분으로만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 영양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당초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 신분의 영양교사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현격히 낮은 수준의 보수와 각종 복지혜택 차단 등 현재의 열악한 보수체계와 근무여건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한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연봉 17,596,080원을 받는 반면, 영양교사의 연봉은 29,993,700원이며, 12년을 근무할 경우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변함없이 17,596,080원의 연봉을 받는 반면, 영양교사는 39,516,000원으로 2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사직으로 결원이 생긴 학교에는 기간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현재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경력 1년차 기간제 영양교사의 임금이 25,516,160원 임에 비추어 볼때 학교 회계직 영양사와의 임금차별의 정도는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를 하루 빨리 개선하는 일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영은 교수님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연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III.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학교 회계직 직군에서 영양사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우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회계직원이란 급식, 과학, 교무, 사서, 방과후수업, 전산, 특수교육, 행정보조 등 40여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비공무원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일한 회계직종으로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만을 하고 있는 타 직종과는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대부분이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자(대학원졸업)이거나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예정자(대학원재학)들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서 영양사를 제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타 회계직종과는 매우 차별화되는 정부차원의 처우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수 현실화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의 지급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타 유사 직종에 비하여 열악한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임용자나 장기경력자간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반직 9급 1호봉의 연봉기준액 적용으로 보수의 격차가 없는 동일한 연봉체제와 근속경력에 따른 승급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영양교사 對 회계직 영양사 급여(연봉) 비교현황, 2011년 기준】

(단위: 원)

구 분	3년차(중등) 기준		지급차액 (회계직 영양사 기준)	12년차(중등) 기준		지급차액 (회계직 영양사 기준)
	영양교사	회계직 영양사		영양교사	회계직 영양사	
연봉 총액	29,937,320	17,596,080	△12,341,240	39,631,640	17,596,080	△22,035,560
본 봉	1,631,400	1,492,850		2,134,000	1,492,850	
정액급식비	130,000	0		130,000	0	
보전수당 (기타중등5년미만)	15,000	0		8,000	0	
보전수당가산금	0	0		47,000	0	
교직수당	250,000	0		250,000	0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83,570	0		83,570	0	
교원연구비	50,000	0		50,000	0	
학생지도비	5,000	0		5,000	0	
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수당)	0	0		60,000	0	
가족수당 (미혼)	0	0		80,000 (남편,자녀2)	0	
월급여총액	2,164,970	1,466,340	△698,630	2,847,570	1,466,340	△1,381,230
명절상여금 (본봉60%×2회)	1,957,680	0		2,560,800	0	
명절휴가비		200,000			200,000	
성과급	2,000,000	0		2,900,000	0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영은 교수님이 주제발표에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영양교사에 준하는 연봉기준의 등급 승급과 경력호봉을 인정하여 해당호봉에 의한 연봉책정으로 영양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양교사에 준하는 각종 복리후생·수당제도 도입 및 맞춤형 복지 제도(포인트)를 확대 지급하고,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정년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하루빨리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으로 변경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따라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 간 순환·전보 임용이 불가하여 동일학교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함께 학교 통폐합 또는 증·개축으로 인해 급식이 일시 중단될 경우, 재직중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해고되는 등의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교육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간 순환·전보를 통해 동일학교 장기 근무에 따른 복무관리 문제 해소 및 식단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 인력 수급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넷째,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하계·동계방학중 자율연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회계직 영양사 대부분이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자(대학원 졸업)이거나 취득예정자(대학원재학)들로서, 전문성 향상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었으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방학 중 자율연수를 제도화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의 간절한 염원인 정규직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로의 특별임용을 위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으로 인해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급식학교의 경우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에 따라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법적근거가 되는 가칭 ‘학교 회계직 영양사 정규직임용(영양교사) 특별법’ 등의 입법화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영양교사 對 회계직 영양사 제반사항 비교 현황】

구 분	영 양 교 사	영 양 사	필요성 및 개선사항
배치기준	- 학교급식법 제7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	- 식품위생법 제35조 -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학교급식전담직원)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법제처해석)
직무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	상 동
신 분	공무원 (영양교사1,2급)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신분보장 필요
보수, 인사	공무원보수, 인사규정	- 학교회계직계약관리기준 -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처리지침	호봉승급, 경력인정 등
호 봉	매년 1호봉 승급	×	매년9급 1호봉 기준연봉제
임용자격	대졸, 영양사, 교직이수	대졸, 영양사 (영양교사 자격은 석사학위 취득자)	영양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대부분 대학원 재학 또는 석사학위 취득
임용권자	교육감	학교장	관할 교육장으로 기 개선
직 무	학교급식법 규정업무 전반	좌 동	직무에 상응한 처우 필요
연 봉	공무원 보수규정 (연봉 약 3,300만원)	9급 1호봉기준 연봉 (연봉제 약 1,759만원)	동일직무에 비하여 연봉 격차 심화
근무형태	순환, 전보 가능	-	동일학교 장기근무중
보 직	영양사 배치학교에 보직가능	영양교사 배치 시 보직연장 불가	영양교사 배치 시 까지 한시적 보직형태
복지혜택	각종 복지, 연수, 후생제도 적용 수혜	맞춤형 복지제도, 자격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자녀학비수당 복지카드 등
직업의식 (전문직)	전문 직종 공무원으로 자긍심, 직업의식 투철	전문 직종임에도 비정규직에 의한 전문 직업의식 저하	동일 직무, 학력, 자격증 보유자로서 상대적 자멸감 상존

#### IV. 마치며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 개선은 정부나 국회 등에서 논의되어야 할 당면한 지상과제이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제발표 해주신 이영은 교수님의 정책제언과 토의발표 해주신 처우 개선 대책들이 해결된다면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전문가로서의 역량 발휘가 기대되며, 수요자 중심인 성장기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변화하는 식생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되어 우수 인력의 학교급식 유입으로 우리나라 학교급식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토의발표

성삼제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